[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조작 수사! 김용은 무죄다 - 정치검찰을 해체하라

이른바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치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기획한 조작 수사였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대장동 사건 관련 소송기록 중 2022년 10월 13일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는, 수사대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피의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 압수조서 기재 일자 바로 전인 2022년 9월 말경, 유동규는 갑작스럽게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정치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유동규의 진술 번복은 진술 번복 즈음에 유동규가 석방되고,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번복되는 점들을 볼 때 사실을 진술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기획 조작에 따른 결과였다고 봅니다.

더욱이 검찰은 유동규의 내연녀이자 사건 관련자인 박모 씨를 정식 조사 절차가 아니라 수차례 장시간 유동규와 함께 불법 면담하며 김용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수사이자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편승하여 과

학적이고 객관적인 디지털 위치 정보인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채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정보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동규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정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영학의 의견서가 공개되며 정치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그 동안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및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고,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대장동 프레임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위해 허위와 왜곡에 기반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진실을 짓밟고, 김용 부원장과 주변인들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점을 바로 잡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라!

2. 유동규 진술 번복과 박태선 불법 면담, ‘피의자 이재명’ 표기 등 정치수사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라!

3. 정영학 의견서와 김만배·최윤길 무죄 판결을 반영하여 대장동 조작 프레임을 전면 재검토하라!

4. 정치검찰을 즉각 해체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검찰청법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이상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한 정치조직이었고, 그 조작의 대가는 무고한 시민의 구속과 민주주의의 훼손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전용기,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윤종군, 이건태,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청와대 전)부대변인 임세은